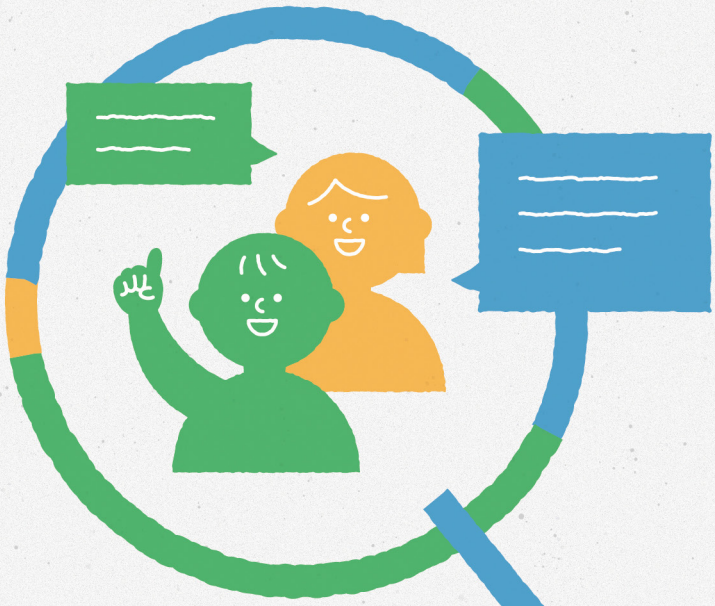
202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 매뉴얼

Youth Participation
Governance Mannual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이 바꾼 오늘 만든 내일

202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참여 거버넌스 매뉴얼

청년참여 거버넌스
매뉴얼을 펴내며

청년참여 거버넌스 매뉴얼은

지역에서 청년참여기구를 함께 만들고 있는
청년, 공무원, 청년센터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부는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위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2부는 청년네트워크 계획과 운영을 위한 방안과 사례를 담았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진, 사무국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3부는 청년참여기구 지원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청년참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따라 청년참여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어, 이 매뉴얼이 현실에 꼭 맞는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쓴이들

김지선(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효원(청년오픈플랫폼 와이 대표)
오가인(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이사)
이주형(전 서울시 청년청 운영지원단)

목차

1부. 참여기구 활동

1.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참여의 의미 07

2. 정책 활동 흐름 13

3. FAQ 19

2부. 참여기구 운영 노하우

1. 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세우기 25

2. 청년네트워크의 운영방법 및 사례 28

3. FAQ 36

3부. 참여기구 지원 방안

1. 운영지원의 주요 내용 39

2. 참여기구 운영유형 42

3. FAQ 48

- 부록

정책제안을 위한 정보탐색 주요 사이트 51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58

정보공개사이트 활용하기 66

1부. 참여기구 활동

1.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참여의 의미
2. 정책 활동 흐름
3. FAQ

1

청년네트워크와 청년 참여의 의미

‘청년네트워크’의 등장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에 국한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주거, 가족 형성,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한 문제는 취업 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청년의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법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 외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 자본소득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이 이러한 현실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는 당사자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청년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청년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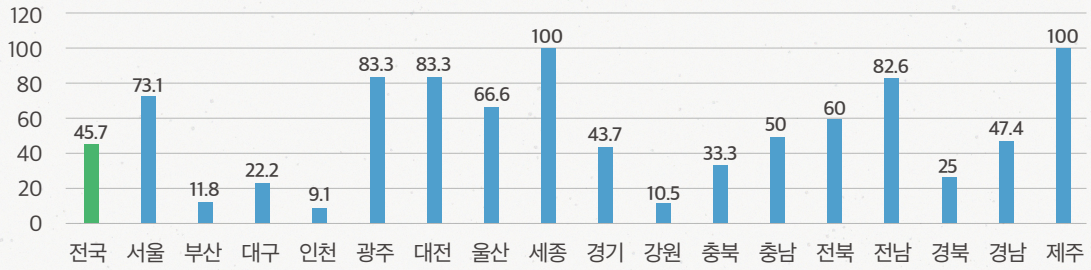
‘청년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청년네트워크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자 청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 및 운영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청년네트워크는 지역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원탁회의, 청년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청년기본조례에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청년네트워크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전국111개(45.7%) 지자체에서 총 5,166명의 청년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림 1 참조

청년네트워크 운영비율 111개 지자체 45.7%



▲ 그림 1. 전국 청년네트워크 운영 현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1,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

청년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참여를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으나 공통으로 '입안, 심의, 결정,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직업공무원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정책 과정'을 함의합니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제도(대의민주주의 정치)가 담아내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적 참여모델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새로운 참여 주체, 즉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중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행정'으로 표현되는 등 행정혁신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의 기반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청년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가 가능해진 것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법으로는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둡니다.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따르면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표 1 참조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중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 · 종교 · 성별 · 나이 · 학력 ·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 ·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 표 1. 청년기본법 조문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 '25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된 법으로는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으로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각 지자체장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98개(81.5%)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참여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원할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청, 청년정책과와 같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682개, 총 3조 3,013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1)]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1,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

청년 참여의 의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는 민주시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시민은 정책참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국가 차원의 활동에 관여하는 '시민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청년정책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에서 '참여'가 핵심 원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청년 당사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과 같은 청년정책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조례 또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참여가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가, 정치인, 전문가 등 기존의 정책 의사결정권자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 1회 청년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20.9.19)-

청년은 참여를 통해 청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담아내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정책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정책 활동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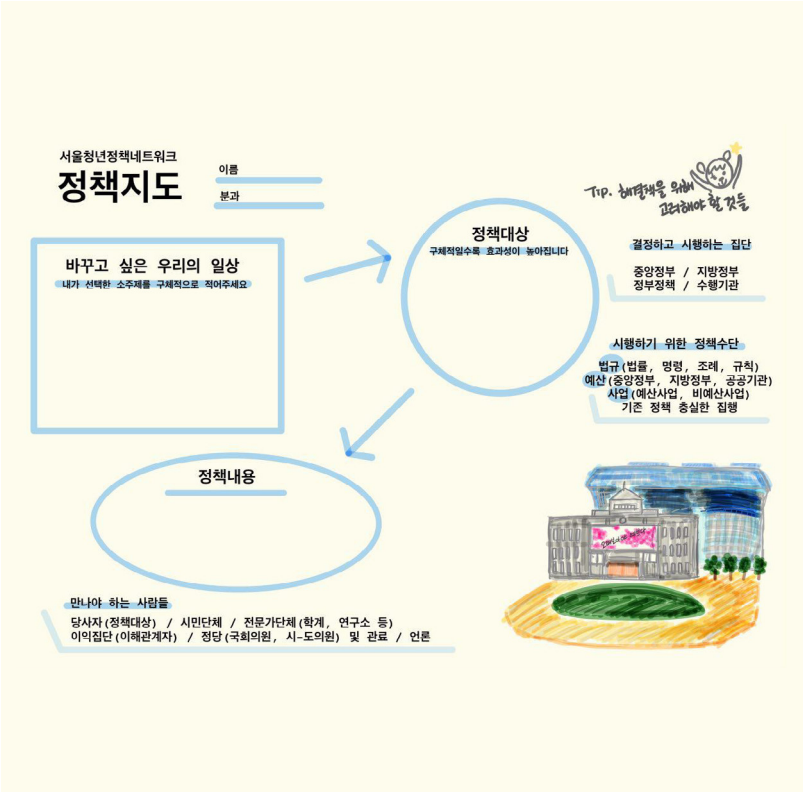
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통해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정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활동은 **1)아이디어 공유 2)내용 구체화 3)자문 및 모니터링 4)아이디어 정책화라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필요와 수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와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근거를 마련한 후, 행정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아이디어 공유

일상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각자 생각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합치고 조율하며, 좀 더 많은 참여자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참여자 간 토론과 합의를 거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추후 정책 수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에서는 '정책지도'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표 2 참조



Step 1. 정책지도 그리기

- 직접 경험했거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각자 고민해보는 단계

Step 2. 정책지도 공유하기

- 모든 분과원이 자신이 만든 정책지도를 공유
-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을 서로 나누면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

Step 3. 정책 아이디어 통합 및 조정

- 비슷한 정책은 조율 과정을 거쳐 통합
- 분과 차원에서 발전시킬 정책 선택

▲ 표 2. 정책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정책지도 그리기(서울시)

▲ 그림 3.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활동

2. 내용 구체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수렴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정책의 배경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때 기존의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관련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해당 정책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표 3 참조

● 춘천시 청년 문화콘텐츠 소비 실태 조사(문화분과)

- **조사 대상 : 춘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청년 164명**
- **조사 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결과**
  - 춘천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문화콘텐츠는 '전시회'이며, 앞으로 원하는 콘텐츠는 공연, 전시회 뮤지컬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함.
  - 춘천시에서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관심 콘텐츠의 부족, 높은 비용,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이 확인됨.
- **정책 제안 : '지속가능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 춘천 관내 공연장, 콘서트, 축제장, 전시장 등 문화콘텐츠 비용 지원 (상·하반기 100명씩 총 200명에게 20만 원 지원)

● 춘천 청년의 마음건강 상담 실태(복지분과)

- **조사 대상 : 춘천 거주 청년 133명**
- **조사 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결과**
  - 첫 상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76%로 높게 나타남.
  - 다수의 청년이 개인에게 맞는 상담기관 연계를 필요로 함.
- **정책 제안 : '청년마음건강 상담지원사업'**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검사비 지원, 센터 연계 (1인당 1년 간 30만 원 한도로 지원)

▲ 표 3. 정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사례(춘천시)
(춘천시 청년청, 2020, 상상이 실현되는 N개의 목소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기존에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그림 4 참조

정책제안을 위한 정보탐색 사이트

정책배경 및 근거자료 : 국가정책연구포털, 국가통계포털, 온나라 정책연구, 공공데이터포털

법령 : 국가법령 정보 센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존정책 : 온라인 청년센터, 정부 정보공개 포털(별책부록 참조)

▲ 그림 4. 정책제안을 위한 정보검색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책대상은 연령, 특정 계층,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부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의 방식으로는 금전적 지원, 인프라 및 공간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3. 자문 및 모니터링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학계, 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를 섭외, 자문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입니다. 이때 기존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표 4 참조

● 일자리 정책 전문가 자문 풀 구성

- 학계 : 대학(노동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 기관 :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시민사회 : 청년당사자단체(청년유니온), 민간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표 4. 정책 자문단 구성 사례

▲ 그림 5-1. 정책 자문 회의

▲ 그림 5-2. 정책 자문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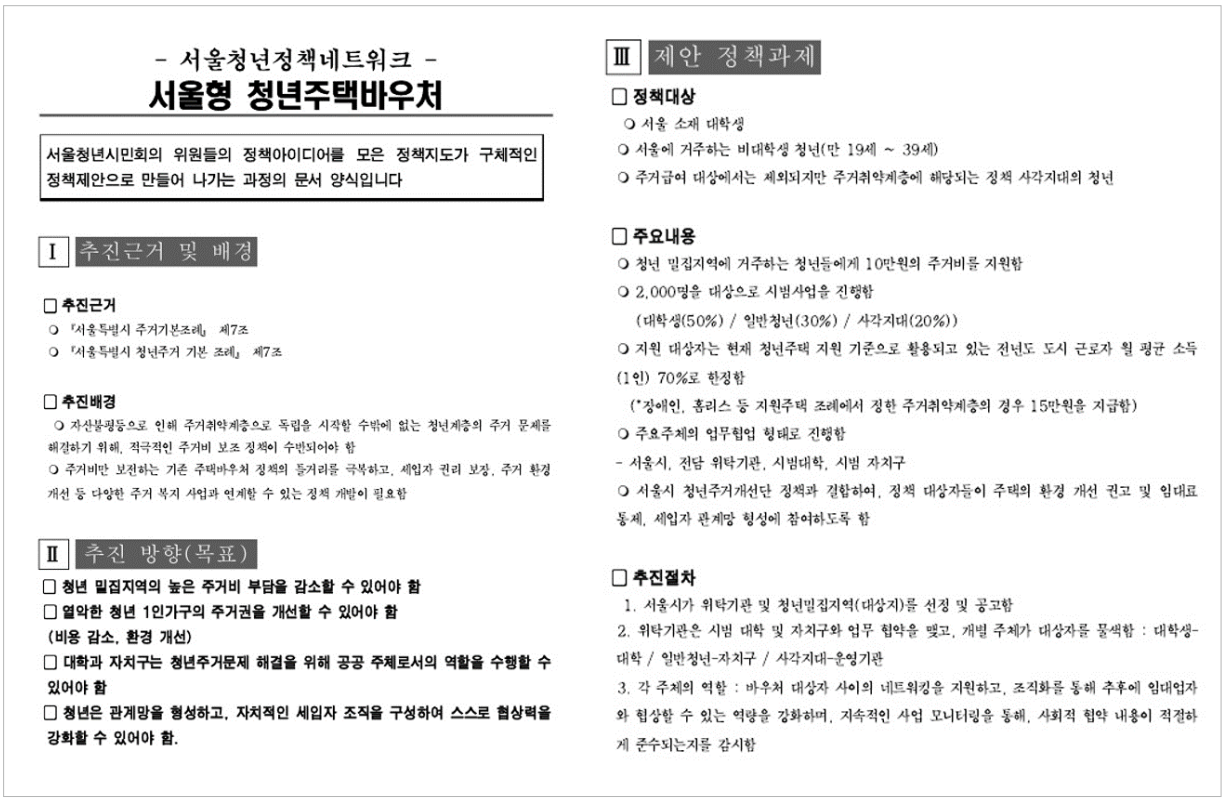
4. 아이디어 정책화

아이디어 공유, 내용 구체화, 자문 및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정책제안서'의 형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책명, 추진근거, 추진배경, 정책대상, 정책내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제안서 구성 요소

정책명	제안정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정책의 목적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추진근거	법률, 조례, 규칙 등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추진배경	정책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상황, 근거가 되는 통계 및 여론 데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정책대상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정책내용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예산 사업(지원금, 프로그램 제공 등) 외에도 비예산 사업(행정지침 변경이나 법률 제·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기대효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정책의 성과 및 정책이 미치는 영향 등을 서술합니다.

- 서울과 춘천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제안서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 참조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서울형 청년주택바우처

서울청년시민회의 위원들의 정책아이디어를 모은 정책지도가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문서 양식입니다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 추진배경
○ 자산불평등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으로 독립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거비 보조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주거비만 보전하는 기존 주택바우처 정책의 틀거리를 극복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Ⅱ 추진 방향(목표)

□ 청년 밀집지역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함
□ 열악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권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함
(비용 감소, 환경 개선)
□ 대학과 자치구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청년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치적인 세입자 조직을 구성하여 스스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Ⅲ 제안 정책과제

□ 정책대상
○ 서울 소재 대학생
○ 서울에 거주하는 비대학생 청년(만 19세 ~ 39세)
○ 주거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정책 사각지대의 청년

□ 주요내용
○ 청년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함
○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함
(대학생(50%) / 일반청년(30%) / 사각지대(20%))
○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년주택 지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1인) 70%로 한정함
(*장애인, 홈리스 등 지원주택 조례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함)
○ 주요주체의 업무협업 형태로 진행함
- 서울시, 전담 위탁기관, 시범대학, 시범 자치구
○ 서울시 청년주거개선단 정책과 결합하여, 정책 대상자들이 주택의 환경 개선 권고 및 임대료 통제, 세입자 관계망 형성에 참여하도록 함

□ 추진절차
1. 서울시가 위탁기관 및 청년밀집지역(대상지)를 선정 및 공고함
2. 위탁기관은 시범 대학 및 자치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개별 주체가 대상자를 물색함 : 대학생-대학 / 일반청년-자치구 / 사각지대-운영기관
3. 각 주체의 역할 : 바우처 대상자 사이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조직화를 통해 추후에 임대업자와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협약 내용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를 감시함

▲ 그림 6. 정책제안서 사례(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2020년 청년청 복지분과 청년마음건강 상담지원사업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1조

–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청년시기(20-30대) 학업, 취업 등 환경적 요인으로 병원 진료 및 심리 상담센터 환자급증[1)]

– 20대 우울증 환자 : 14년 49,000명 → 18년 98,000명 2배 이상 증가

○ 2018년 청년(20-30대)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17.8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1.5명 보다 높음[2)]

– 2018년 춘천시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이 20명

○ 최근 급격하게 악화 되는 청년들의 심리, 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춘천시 청년 마음건강 증진도모

☐ **추진방향**

○ 우울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마음건강 치료비를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통한 청년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치료로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함.

Ⅱ 제안 정책과제

☐ **정책대상**

○ 만19세-39세 춘천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 **주요내용**

○ 청년 마음건강 발굴, 개입, 홍보 및 예산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검사비 지원, 센터연계

– 1인당 30만원/ 년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질의 치료상담 실시를 위해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정

○ 청년시크릿사업

– 춘천시 청년청에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배치하여 청년마음건강상담, 고위험군 청년 발굴 및 예방 심리치료센터 연계 및 청년층 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청년청 사례관리(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담당자에게 제출(치료기관 선정 및 상담사 자격 증명자료 등)

☐ **기대효과**

○ 우울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마음건강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부담경감

○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통한 청년정신건강증진

○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굴 치료로 만성화 예방 회복 촉진

○ 청년 안정적인 생활과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

▲ 제안서 예시

3

FAQ

Q1.

"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

국어사전에서는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정치학자 이스턴은 정책을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라스웰은 '문제 변화를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으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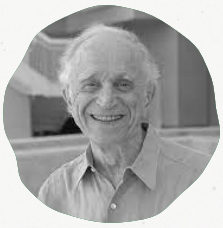
이처럼 정책의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으로 '공공의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의합니다. 사회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법, 사업, 방침 등 공공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앞서 살펴본 청년기본법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표 5 참조

정책은
'문제 변화를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

- Harold D. Lasswell

정책은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 David Easton

● 청년기본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청년 관련 사업은 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음.
해결 방법	고용, 창업, 주거, 복지, 금융 생활, 문화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경제적 곤란함으로 인하여 사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이 많음.
해결 방법	청년의 사회 진입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및 서비스(고용서비스, 개인 상담 등)를 제공함.

▲ 표 5. 정책 사례

Q2.

" 정책을 파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

기존정책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법, 사업, 예산입니다.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법은 크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정책과 관련된 법은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 자치법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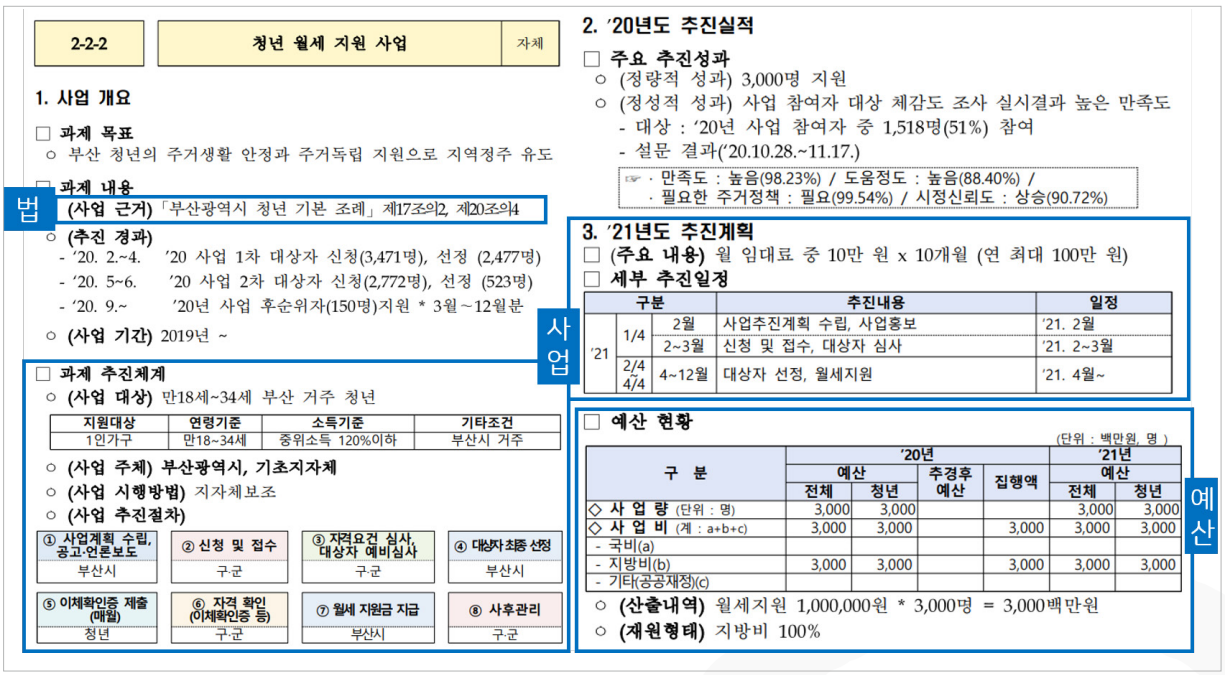
사업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사업(지침)에는 정책 대상, 사업의 기간, 추진의 방식, 전달 체계 등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작습니다. 예산은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가지게 되는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예산을 통해 해당 정책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그림 7 참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근거는 자치법규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17조의 2에서는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는 만 18~34세 부산 거주 청년이라는 사업대상,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는 주요 사업내용,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부터 월세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추진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예산은 지방비 100%로 지출되며, 그 규모는 30억으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연 100만 원 X 3,000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체

1. 사업 개요

□ **과제 목표**
○ 부산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독립 지원으로 지역정주 유도

□ **과제 내용**
법 **(사업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2, 제20조의4
○ **(추진 경과)**
- '20. 2.~4. '20 사업 1차 대상자 신청(3,471명), 선정 (2,477명)
- '20. 5~6. '20 사업 2차 대상자 신청(2,772명), 선정 (523명)
- '20. 9.~ '20년 사업 후순위자(150명)지원 * 3월~12월분

○ **(사업 기간)** 2019년 ~

□ **과제 추진체계**
○ **(사업 대상)** 만18세~34세 부산 거주 청년

지원대상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1인가구	만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부산시 거주

○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 **(사업 시행방법)** 지자체보조
○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공고·언론보도	② 신청 및 접수	③ 자격요건 심사, 대상자 예비심사	④ 대상자 최종 선정
부산시	구·군	구·군	부산시
⑤ 이체확인증 제출 (매월)	⑥ 자격 확인 (이체확인증 등)	⑦ 월세 지원금 지급	⑧ 사후관리
청년	구·군	부산시	구·군

2. '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추진성과**
○ (정량적 성과) 3,000명 지원
○ (정성적 성과) 사업 참여자 대상 체감도 조사 실시결과 높은 만족도
- 대상 : '20년 사업 참여자 중 1,518명(51%) 참여
- 설문 결과('20.10.28.~11.17.)

☞ · 만족도 : 높음(98.23%) / 도움정도 : 높음(88.40%) /
· 필요한 주거정책 : 필요(99.54%) / 시정신뢰도 : 상승(90.72%)

3. '21년도 추진계획

□ **(주요 내용)** 월 임대료 중 10만 원 x 10개월 (연 최대 100만 원)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21	1/4	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홍보	'21. 2월
		2~3월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심사	'21. 2~3월
	2/4 4/4	4~12월	대상자 선정, 월세지원	'21. 4월~

사업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년 예산 전체	'20년 예산 청년	'20년 추경후 예산	'20년 집행액	'21년 예산 전체	'21년 예산 청년
◇ 사 업 량 (단위 : 명)	3,000	3,000			3,000	3,000
◇ 사 업 비 (계 : a+b+c)	3,000	3,000		3,000	3,000	3,000
- 국비(a)						
- 지방비(b)	3,000	3,000		3,000	3,000	3,000
- 기타(공공재정)(c)						

○ **(산출내역)** 월세지원 1,000,000원 * 3,000명 = 3,000백만원
○ **(재원형태)** 지방비 100%

예산

▲ 그림 7.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서
(부산광역시,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Q3.

"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정책의 진행 과정은 1) 투입, 2) 심의·결정, 3) 집행, 4) 평가·환류와 같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가·환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입으로 이어지며, 지속해서 순환됩니다 - 그림 8 참조

▲ 그림 8. 정책의 과정

투입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당사자의 필요와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회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은 투입 단계에서 제안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은 투입 단계에서 논의된 정책의 목적과 결정·심의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앞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평가·환류는 정책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과정 평가), 또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효과 평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정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Q4.

" 정책 활동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1. 대상과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은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라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대학생"과 같이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모든 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서로 경쟁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 집단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 채용 3% 의무규정의 경우, 34세 이상의 청년은 정책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쟁 집단이 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 청년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을 제안할 때는 이 같은 정책 경쟁 집단과 이해관계자를 파악 및 고려해 사회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동의하는 '집단'이 많을수록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경쟁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모수가 많거나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을수록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아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법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사회적으로 조명받으면서 관련 조례나 정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제안도 좋지만,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 대상의 규모를 늘리거나 정책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식의 제안도 의미 있습니다. 기존정책은 법적 근거와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 및 관련 기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수월합니다.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부. 참여기구 운영 노하우

1. 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세우기
2. 청년네트워크 운영방법 및 사례
3. FAQ

1

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 세우기

청년네트워크 현황 파악하기

청년네트워크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참여자 현황, 운영주체의 준비 정도, 행정부의 여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잘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수(연차)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 **가용예산 범위**

- 연간 사업의 개수와 규모, 참여자 활동 지원의 방식과 비용을 결정합니다.

주체 **운영진 인원과 준비 정도**

- 분과별 현황파악 및 정책 활동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전문가, 청년단체, 기관연계 정도**

-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위한 외부 자문 및 자료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집 후 운영과정에서는 참여자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집과정에서 수집하는 참여자 성별, 직업, 연령 등의 기초정보 외에도 거버넌스 참여 경험 여부, 참여 동기, 관심 있는 의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연간흐름 짜기

청년네트워크 연간 사업은 행정과 의회의 흐름을 고려해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청년네트워크 참여자 임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참여자를 모집하면 하반기에 정책제안을 하고, 하반기에 모집하면 다음 해까지 운영합니다. 전자는 행정의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2-3월에 시작해 11월에 끝이 나고, 후자는 9-10월에 시작해 다음 해 8-9월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table>
<tr><th></th><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정책 수립
집행 과정</td><td>예산 확정
및 고시</td><td>예산 배정</td><td>예산 집행</td><td colspan="3">사업 실행</td><td>사업
계획서
작성</td><td>사업 검토</td><td>부서별
예산요구
취합</td><td colspan="2">예산(안)
작성
지방의회
제출</td><td>[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및 의결</td></tr>
<tr><td>연간 흐름</td><td colspan="3">모집과
교육</td><td colspan="4">분과활동 · 정책제안</td><td colspan="4">후속조치 및
마무리</td></tr>
</table>

▲ 표 1. 청년네트워크 연간 흐름 (예시)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연간 일정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정책제안서 형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혹 청년네트워크 활동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구체적인 정책시기를 알아야 안정적인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며, 분과활동 계획이 구체화되고 정책제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표2. 청년네트워크 연간 사업 (예시)

청년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모집, 교육, 분과활동, 정책제안 행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모집과 교육 시기에는 분과 구성 및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발대식 등의 행사를 엽니다. 이 밖에 정책제안 및 활동 안내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분과활동 시기에는 참여자들이 토론과 자료조사를 위해 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최종 정책제안 전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위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결과보고회, 정책제안회, 청년의회 등으로 형태와 이름은 다양합니다. 참여자들이 만든 정책을 행정과 시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정책제안 행사가 끝난 후에는 예산반영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자 전체가 함께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효능감을 느끼고 이듬해 청년네트워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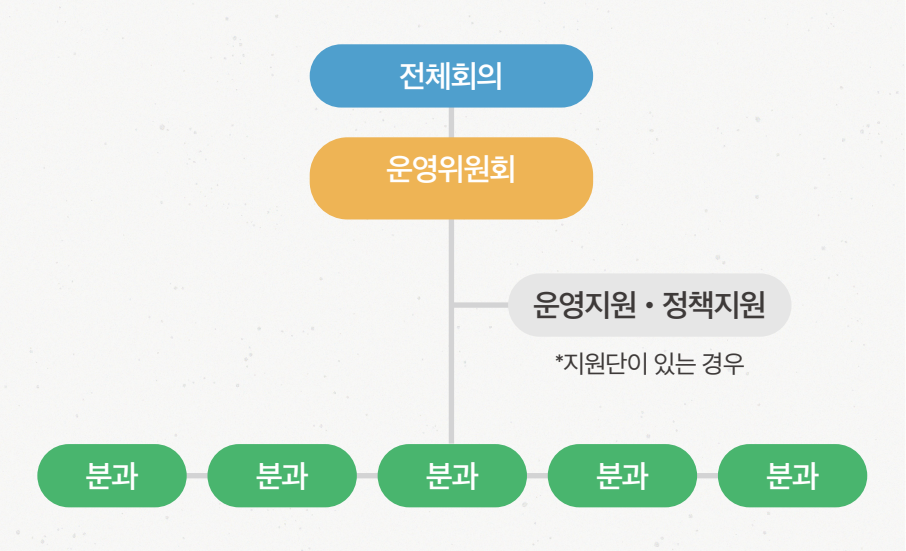
분과장·운영위원장 선출하기

분과를 구성하고 나면, 분과장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운영위원장(대표)은 2인을 선출하거나 지역에 따라 선출하지 않기도 하지만, 분과장은 효과적인 분과활동을 위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과장은 분과원 연락, 모임 시간 조율, 장소 섭외, 정보 확인 및 공유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논의내용과 고민을 행정에 전달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입니다.

분과장 선출 시에는 사전에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로 이뤄진 운영구조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 같은 회의 체계를 통해 논의, 협의를 거치는 구조임을 참여자가 인지해야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의 성패는 운영위원장 및 분과장 선출 등의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참여자 누구나 '장(長)'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운영체계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구분	기능
전체 회의	• 정책제안을 위한 전체 토론, 주요 사안 의사결정 • 행사 및 사업기획 토론 및 의견 수렴
운영위원회 (한 달에 한 번)	• 분과별 논의 상황 공유를 위해 분과장으로 구성 • 사업 및 운영 전반 기획·조정을 위한 상설적 의사결정기구
분과회의 (2주에 한 번)	• 정책토론, 자료조사 등 정책제안을 위한 참여자 모임 •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기초단위

▲ 표3. 청년네트워크 운영구조 예시

분과장 및 운영위원장 선출 뒤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과장을 뽑고도 회의를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참여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도 세울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청년네트워크 운영 방법 및 사례

참여자 모집과 교육

모집과 교육은 청년네트워크 운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자는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역할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심사가 비슷한 참여자들이 만남까지 첫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팀 빌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청년네트워크의 1년 운영성과가 가늠됩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만나는 첫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지역에 따라 발대식, 오리엔테이션(O.T), 캠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행사의 내용이 간혹 위촉장 수여, 의원 및 자치단체장 인사, 활동 안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성만으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의 참여 동기나 관심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 연간 일정 안내 2) 운영구조 및 지원사항 안내 3) 정책제안에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활동안내를 정확히 해야 참여자 스스로 청년네트워크의 목표와 방향성을 인지하고 각자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경험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안전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약속문, 활동규칙 등을 함께 만들어, 행사 때마다 자리에 붙여 놓거나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한국 사회에서 정책 대상자로 호명되지 못했던 '청년'을 호명하고, 청년이 시민으로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정참여기구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참여의 확대를 위해 열린 구조를 지향합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없었던 장벽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약속문을 통해, 우리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최소한의 문화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입니다.
나이·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장애와 혼인 여부·국적·피부색·출신 지역·학력·가족관계·직업·채식 여부·종교 등과 무관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말하는 이는,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며,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를 주의하며 타인을 평가하는 발언에 유의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혐오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는,

말하는 이를 존중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경청해 봅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이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문제 제기 방법으로 지적보다는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취합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모든 참여와 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합니다. 본 약속문에 열거된 내용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봅시다.

▲ 표 4.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

존중받는 나, 민주적인 공동체를 위한 일곱 가지 약속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

-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서로를 존중하며 높임말을 씁니다.
- 우리는 나이·성별·경험·학력·인종·종교·신체조건에 차이가 없습니다.
- 우리는 당신의 존재가 아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거절 의사를 존중합니다.
- 모든 의견은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지향하고 비난을 지양합니다.

▲ 표 5.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

정책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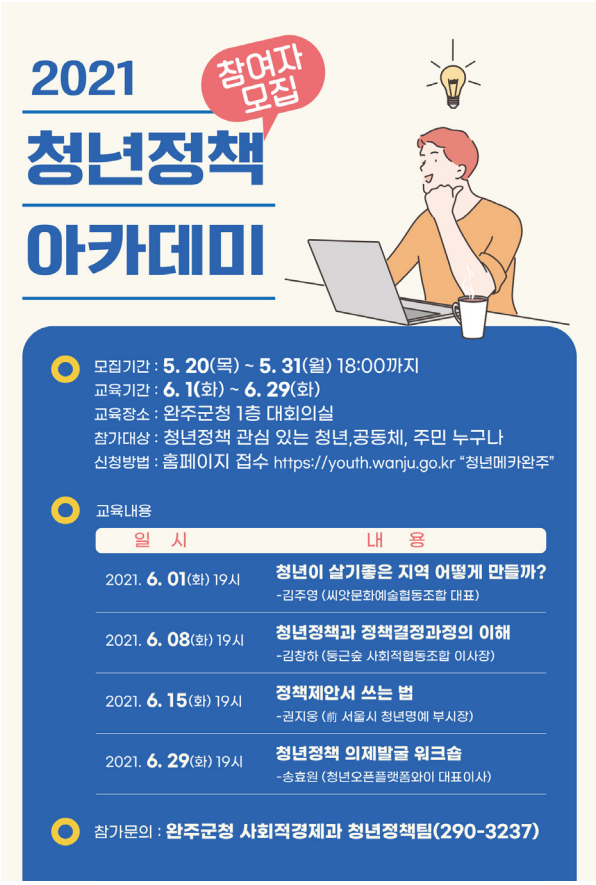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전체교육과 분과별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전체교육은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과 정책제안 사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분과별 교육은 전문가를 통해 분과별 정책의 특징과 관련한 정책사례를 알아보는 등 분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아카데미의 목표는 참여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기획 단계에서 참여자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여자가 정책제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통해 다음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한 개념 및 정책 구성요소 파악, 거버넌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조사와 정책정보 찾기 실습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책 및 활동 사례를 교육하는 것도 정책제안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전국지자체를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커리큘럼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	내용
(강의) 청년정책과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청년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이해, 정책제안 프로세스 이해
(강의) 정책제안서 쓰는 법	정책제안서 기준과 작성 방향, 제안서 구성요소 이해와 정보찾기 실습
(강의) 청년참여의 의미와 정책이해	거버넌스와 참여의 의미, 지역 청년기본조례 및 발전과정의 이해
(강의) 청년정책과 참여기구 사례	기초 · 광역 청년정책 사례 공유와 정책 활동 정보 제공
(강의) 청년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의 이해	청년의 현실과 청년기본법 이해, 정부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강의) 청년참여기구 운영 노하우	참여기구 운영원리 및 방향, 타 지역 참여기구 사업 예시
(워크숍) 청년정책 의제발굴 워크숍	분과별 정책도출을 위한 숙의 토론,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표 6. 2021 서울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커리큘럼 / 청년 오픈 플랫폼Y



▲ 그림 1. 완주 청년정책아카데미

▲ 그림2. 부천시 청년공감아카데미

분과회의를 통한 정책 만들기

분과회의는 정책을 토론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분과는 최소 3~4인에서 최대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보통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과정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	• 추진근거 법령 확인 • 필요와 현황 통계조사 • 사업내용 구체화 • 필요 예산 산출	▶	정책제안서

통계 및 자료, 연구조사,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분과회의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이 보유한 각종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및 교육연계를 통해 논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활동비나 모임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간혹 일부 행정이나 운영지원단에서 분과활동 동안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로 분과활동의 횟수만 정해주고 참여자끼리 알아서 정책을 생산해 제안하기를 바라는 행정이나 운영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의 참여동기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마지막까지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할 운영방식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분과별 진행상황 및 이슈발생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림 3. 포항청영년참여단 봉사활동

▲ 그림 4. 서울청년네트워크 영화번개

행정과의 만남, 정책제안

분과토론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행정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장은 참여자, 행정 담당공무원, 의원뿐 아니라 시민들을 적극 초대해 열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은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동력을 얻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정책제안회 전에 토론회, 캠페인 등을 진행해서, 전문가, 공무원, 의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책제안 행사는 거버넌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제안을 발표하는 것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부서장(국장급)이 참석하여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답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그림5. 춘천시 청춘의회

▲ 그림 6. 경남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회의

정책제안을 위해 발표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현장에서 운영할 때 '내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지속적인 참여의 동기와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은 개인 명의의 제안이 아니라 팀 단위 제안의 방식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혼자서 다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팀) 단위 활동-설문조사나 자료조사, 현장탐방, 유사 내용과의 의견 조율 등-의 결과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과정에서 효능감을 높이려면

청년네트워크 활동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효능감은 정책의 수용과 불수용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제안한 정책이 수용되고 실제 집행된다."라는 것이 물론 가장 큰 효능감을 주겠지만,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게 되면 운영과정을 설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거버넌스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동료를 만나는 과정,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전반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책이 수용되는가 아닌가"만을 고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번개모임, 봉사모임, 온라인 회식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자 간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자 교육이나 맴버십 캠프 정책제안회 등의 행사를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카드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개개별의 목소리와 분과 활동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참여의 결과물이 꼭 정책의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거나 확산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조치 및 마무리

행정과 의회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자.

대개 정책제안은 7-8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정책이 통과되어 이듬해 시행되기까지는 정책제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정책을 의회에서 확정하기 위해 행정은 내부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책 내용이 대폭 수정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참여자들은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시의원들과의 협력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 간 평가를 잘 해야 다음이 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개 2년 연속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청년네트워크 활동 평가를 잘해야 다음 운영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참여기구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참여해보니 어떤 과정이 추가로 진행되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자 평가 항목 예시

- 1.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지지받을 동료를 만났다.
- 2. 다른 분과이도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
- 3. 행정과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4. 우리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5. 대화와 토론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 6.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제안 과제를 잘 정리해 시민들과도 공유하자.

앞서 강조했지만, 정책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 수도 있고,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책제안 대표 발표자의 발표문을 정리해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참여자들에게도 다시 공유합니다. 어떤 문제인식에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 시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올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간 평가를 잘 해야 다음이 있다.

참여자들이 낸 정책 제안의견 중에 최종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과제 중에 환경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년에 그 의제가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구성은 변화되어도 청년은 문제 인식을 지속하고 그사이에 고민은 더 숙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의 정책 제안을 위해 참여자들의 문제인식을 충분히 들여다보기를 권합니다.

3
FAQ

Q1.

어떤 참여자들은 자기 의견만 얘기하려고 하고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견을 조율하지 않는 참여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참여자로 인해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 논의가 공전하거나 적절한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의진행자에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필수로 제공합니다. 회의진행자가 사전교육 없이 분과회의에 들어가면 발언을 독점하는 참여자가 생겼을 때 적절한 조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2.

항상 전체의 의견을 듣기 어려워 분과장들과 회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정했다'라고 느끼는 참여자가 많아요.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참여자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인가 결정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모임과 회의는 사전에 공지하고, 논의 결과 및 운영과정에서 얻는 정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 지역이 단체 톡방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이때 메일이나 문자, 단체 톡방, 온라인 플랫폼 등의 기능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들은 해마다 새로운 참여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새 정보나 역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분과회의와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평가를 병행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참여자, 참여자-참여자 간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를 원활히 해결하려면 시기별 평가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분과회의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은 지난 논의를 반복하지 않고 회의를 흐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모든 행사와 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논의된 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문화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되도록 처음 운영규칙을 정할 때 논의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사람들과 토론해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들었고 정책이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받아들여진 것이 없어요. 행정과 청년이 원하는 결과의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정책결정 과정은 '임의성'이 아닌 '구조적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각기 다른 권한과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 내에서도 행정부서 간 과업 범위가 나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당자는 참여자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외의 상급관리자(팀장이나 과장)가 반대한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의 동의를 얻어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과 행정이 협력하여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양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참여기구는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단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책제안 수용개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조정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해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부. 청년참여기구 지원방안

1. 운영지원의 주요 내용
2. 참여기구 운영유형
3. FAQ

1

운영지원의 주요 내용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것

청년네트워크를 처음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 할을 맡게 되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참여자들의 효능감과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협의와 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다양한 시정 참여를 경험하는 시민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네트워크의 성과는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정책의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년네트워크에서는 '충분한 정보', '건강한 토론',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거버넌스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의 효능감과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이해한 후에 숙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참여자들 간이나 참여자들과 운영·지원자 간의 건강한 소통과 토론을 보장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협의입니다.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숙의와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의 운영괴정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운영과정도 참여자들과 함께 결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청년네트워크 사업은 단순히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네트워크는 많은 경우 청년들이 행정을 마주하는 첫 자리이기도 합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방정부를 마주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버넌스를 운영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확한 활동 안내 제공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하는 사람과 참여자 모두가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이 공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처음은 한 해의 활동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의 활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목표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행정 사이에는 사용하는 단어도, 일을 진행하는 흐름까지도 간극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운영·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에 가깝습니다. 당사자의 언어를 잘 해석하고, 그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행정의 과정과 절차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분과별 논의 진행 상황 파악

운영지원의 역할은 단순히 모임을 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사업의 성패도 디테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모임 개최 여부, 참여자 사이에 갈등 및 제도의 효능감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모임의 상황과 참여자의 욕구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였는지, 모임에서 자신의 욕구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구성원은 없는지, 현재 활동에 대해 참여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같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확인되기 어려운 정보와 상황들은 관계에 기반을 둔 많은 대화로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모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운영의 과정에서 각각의 위치와 역할도 명확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용역사를 선정하여 문제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과한 요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 정책정보 제공 및 협의 소통

참여자들의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는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좋은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공유 가능한 모든 문서를 모아서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를 애써 전달하여도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참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참여기구 운영유형

네트워크 운영 유형

청년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행정이 협업하는 하나의 거버넌스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중심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 및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간의 활동을 팀 혹은 소속 주무관이 주도하거나 청년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강화하거나 기획사 혹은 대행사 등을 통해 연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등도 있습니다.

- 행정 직접 운영

행정 내 청년 정책 조직의 담당자가 연간의 사업을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고,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담당자 몇 명이 네트워크 전반의 운영과 행정 내부와의 소통 등을 전담하고 제안된 내용 등을 다른 부서와 협의합니다.

- 중간지원 및 출연기관 조직 운영

조례상 근거하여 청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산시의 부산청년센터와 광주시의 광주청년센터 등이 있습니다. 혹은 출자·출연기관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 그림1. 부산청년센터

- 민간협력 강화 운영

청년 당사자들의 주도적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춘천시의 청년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 운영계획 수립 및 연간 활동운영 및 정책지원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협력 운영이 예산과 자원을 행정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순히 청년네트워크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운영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림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운영 용역 방식

아예 청년네트워크 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사 혹은 용역사 등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하였던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의 행사 혹은 사업 등을 개별적인 기획사에게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운영 전반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운영 용역 등에 참여하는 사례 등도 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네트워크의 취지와 목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강화 조치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행정 안으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효능감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의 효능감은 청년네트워크의 참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효능감이 낮아지면, 참여도 역시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는 결국 사업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제안이 행정 안으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예산 및 재정 개입 강화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제를 제안하는 청년들로서는 자신의 문제가 구현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효능감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네트워크의 제안 과정에 예산편성 장치를 적극적으로 결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은 이미 국가 차원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아주 높은 제도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전라남도 완주군 등에서 이미 참여예산제도와 청년네트워크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네트워크에 별도의 예산편성 과정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 등이 있습니다.

- 참여 강화

청년네트워크를 포함하여 행정 내에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병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미래인재 양성 및 15% 위원회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 등에 최소 15% 이상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과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자문 연계 전략

청년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의 고민이 보다 심화될 수 있도록 여러 자원 등과 연계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지역에 관련 유관기관, 대학, 전문가 등의 자문 풀을 구축하여 청년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정책자문을 연계해주는 것만으로도 참여자들의 효능감과 제안활동의 역량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청년네트워크의 논의내용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행정 내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파트너십 확대 사례

거버넌스 파트너십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하는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를 넘어, 타 사업부서와 의회와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 역시도 거버넌스의 운영지원에 해당합니다.

행정 사업부서(실·국·본부) 간 정책간담회

거버넌스는 협의와 조정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가 제안한 정책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만 그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와 조정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제안 과정에서 사업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부서와 적절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 의견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사업을 사업부서와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네트워크는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역시 민원인으로 청년네트워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친절한 설명을 바탕으로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업부서와의 협의는 이처럼 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여자와 사업부서 모두에게 제안 취지, 방향 등 청년네트워크의 제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회 파트너십 강화

또한, 지방정부의 입법부인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청년네트워크의 문제해결을 제도개선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 확대는 추후 청년네트워크의 제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2016년 서울시의 청년네트워크에서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그 밖에 사진촬영, 메이크업 등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가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없다며 사업부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제안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을 협의하였고, 이후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청년네트워크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안 사업의 수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스킨십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가며,

거버넌스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통한 당사자 주도형 청년정책의 구성은 그간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렀던 청년들은 정책의 공급자로, 정책의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현장 등에서 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
FAQ

Q1.

"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

우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참여를 하는 청년 자체가 많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네트워크 참여하는 청년들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열린 참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문턱을 만들어 참여를 오히려 저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고려하여 평일 낮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모임 시간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여자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2.

"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풀 자체가 부족합니다 "

거버넌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투여하고, 성장하기 위한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를 연계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청년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 상황이므로 청년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Q3.

" 참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행정 안으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여자들의 효능감을 보장해줄 수 없고 그것이 지속해서 ‘거절’의 경험만을 가지게 될 경우,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참여도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는 사업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참여예산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참여자들의 효능감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국 간담회 등을 통해 ‘친절한 거절’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4.

" 타 지역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실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등에 타 지자체의 청년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등을 통해 전국의 청년정책 및 공간 등의 인프라 등을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Q5.

" 정책지원단(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년네트워크를 참여했던 청년들이 협의와 조정 과정의 경험 등을 통해 이후 참여자들에게 정책 제안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정책지원팀(단) 등으로 꾸리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정책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인적 조건이라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책자문을 연계시켜주는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

- 정책제안을 위한 정보탐색 주요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 정보공개사이트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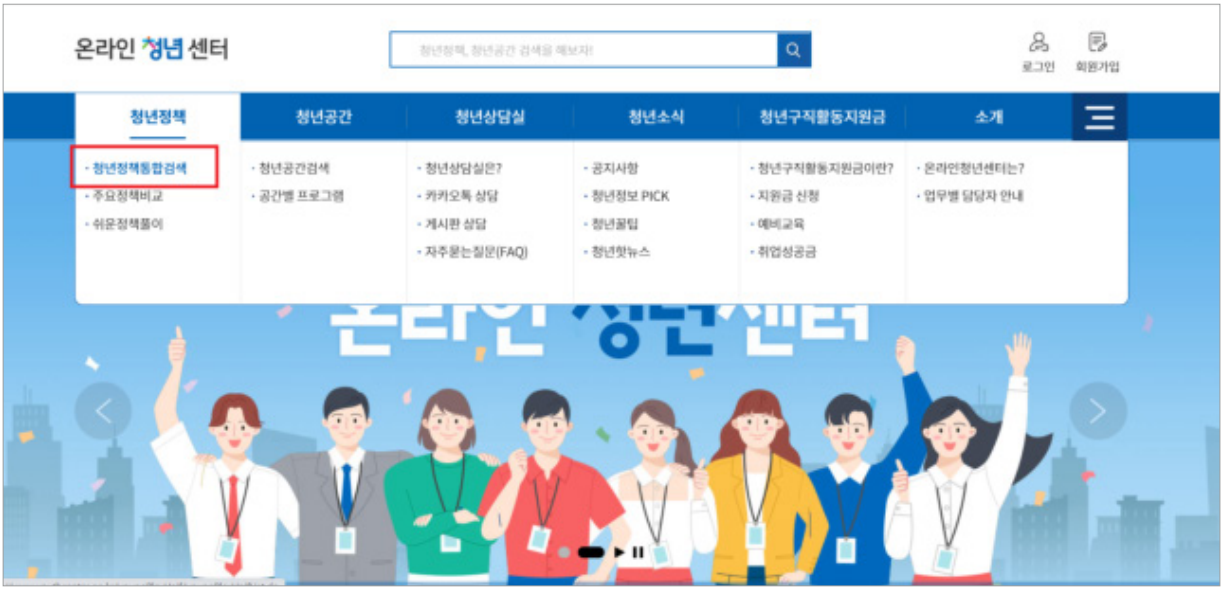
정책제안을 위한
정보탐색 주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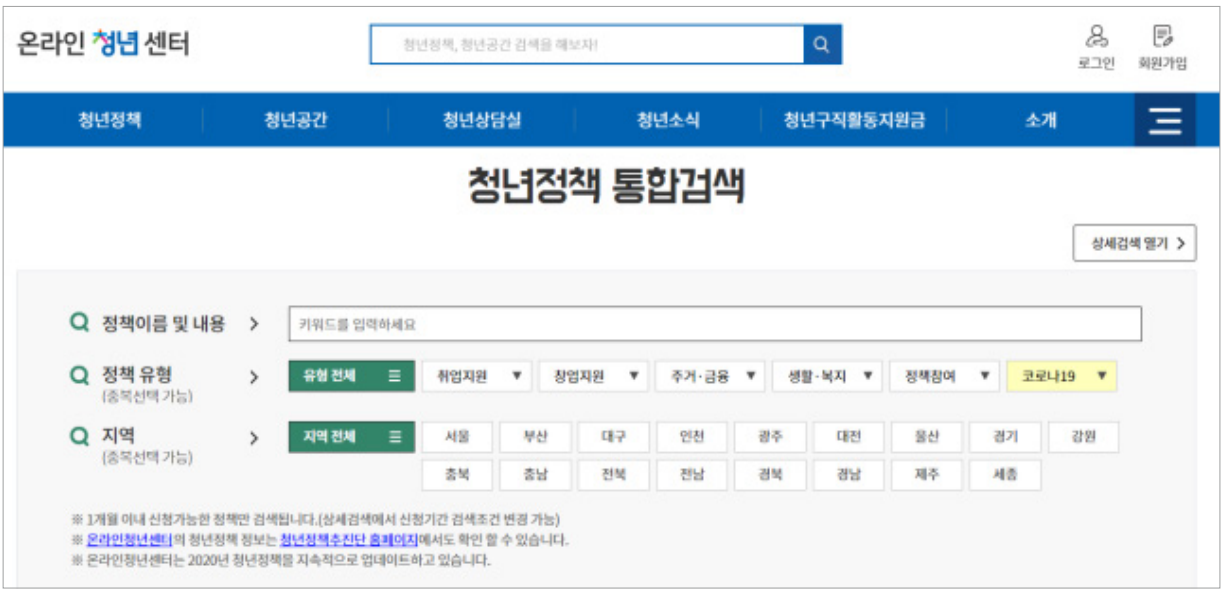
정부 · 지자체 청년정책 검색

• 온라인 청년센터

-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 및 관련 내용 등 확인

https://www.youthcent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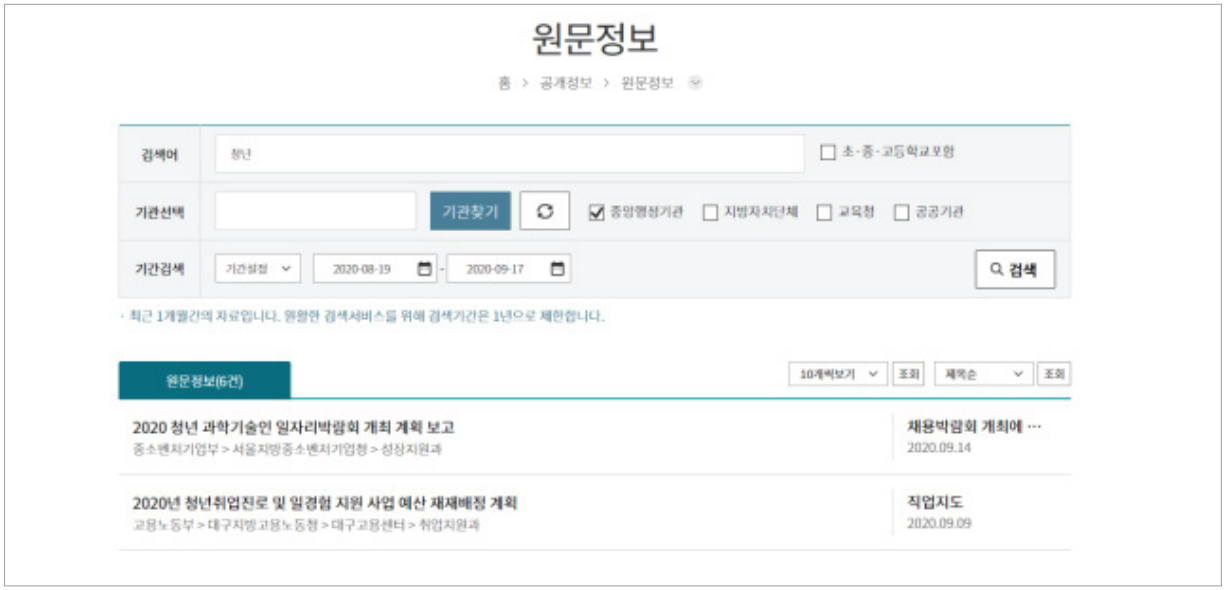
▲ 온라인 청년센터

행정 문서

• 정부 정보공개 포털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행정 문서들 수록,
- 해당 정책제안 내용 원문 문서 확인 가능

https://www.open.go.kr



▲ 정부 정보공개 포털

법령

• 국가법령 정보 센터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모든 법률에 대한 정보수록
- 정책제안을 위한 법률적 근거 확보 시 활용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 정보 센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현재 국회에서 심의 및 검토 중인 법안에 대한 정보 수록

https://likms.assembly.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예산

• 열린재정

- 국가 재정자료 통합 제공
- 정부 부처 사업별 집행실적 등 확인 가능

https://www.openfiscaldata.go.kr

▲ 열린재정

•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 예·결산 분석 및 사업 평가 보고서,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경제 전망 및 정책 분석 등의 내용을 확인

www.nabo.go.kr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배경 및 근거자료 찾기

• 국가정책연구포털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https://www.nkis.re.kr

▲ 국가정책연구포털

• 국가통계포털

- 국내 주제별 통계 제공, 이슈 및 해당의제 관련 통계자료 검색 용이

https://kosis.kr

▲ 국가통계포털

정책배경 및 근거자료 찾기

• 온나라 정책연구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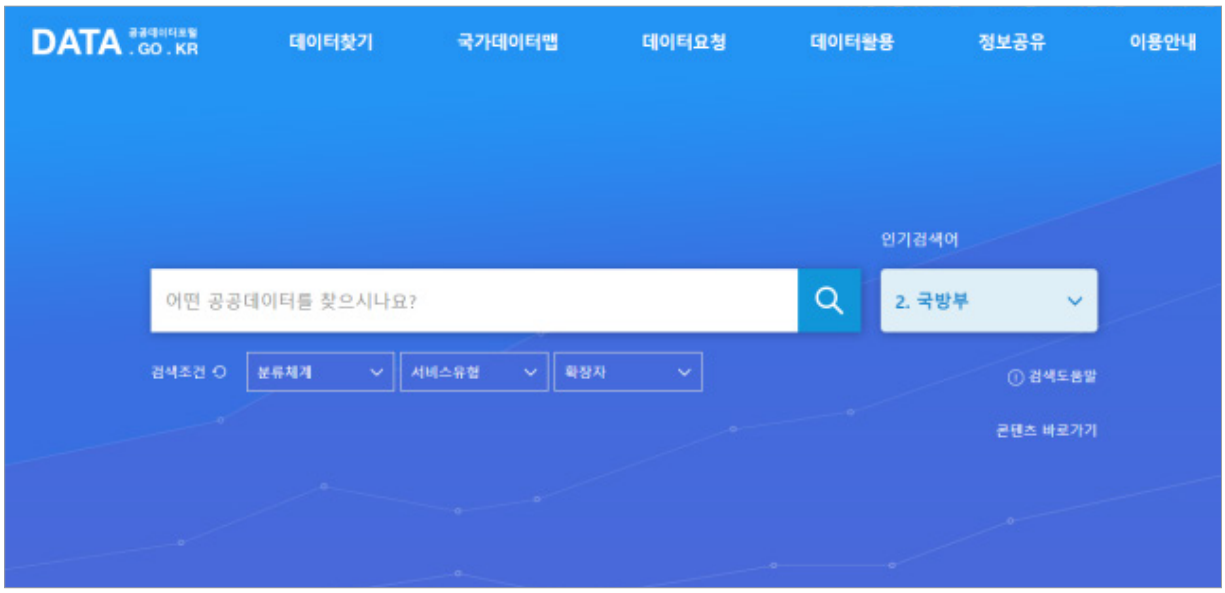
www.prism.go.kr

▲ 온나라 정책연구

• 공공데이터포털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

https://www.data.go.kr



▲ 공공데이터포털

분야별 관련 정책 참고 사이트

분과	사이트	
일자리	부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주거	부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연구소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복지·문화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교육	부처	**교육부** https://www.moe.go.kr/ **국가교육회의** https://eduvision.go.kr/
	연구소	**교육학술 정보원** https://www.keris.or.kr/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참여·권리	부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구소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http://www.krila.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사회가 있는 곳엔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은 중요하지만 다소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법이 필요할 때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매번 변호사를 찾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WHAT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법령정보를 알 수 있는 법령 검색 원스톱 웹사이트입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와 해석 등을 한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어떤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이버, 구글, 다음등에 게시된 여러 사례를 클릭하여 정보를 취합할 수도 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당사자를 보호해줄 법적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며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학지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법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가 나타나며, 원하는 법령을 선택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검색을 통해 어떤 법안의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고, 법령체계도, 연혁, 상하위법 비교, 나만의 법안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해당 법령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포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메인화면 중앙에는 어떤 내용이든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검색결과의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법령정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왼쪽 중앙에는 기관별, 법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대한민국 법령체계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떠올리지만, 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모두 포함하여 '법', 혹은 '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상위 법 규범으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직접 제정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인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상위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

헌법	최상위 법
법률	입법기관 국회 의결 거쳐 제정되는 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회의결X)
시행규칙	국무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정

▲ 법령체계

HOW
국가법령정보센터

1. 검색범위 설정 및 키워드 검색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화면 검색엔진에 필요한 키워드를 단어 혹은 단어+단어로 입력합니다. 이때 검색버튼을 누르기 전 왼쪽의 검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현행법령인지, 자치법규인지, 판례인지 해당 검색범위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거나 법령체계가 모호할 경우 '통합검색'을 선택하고 검색어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법률용어 검색하기 전 검색범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기본 설정값인 [현행법령]으로 검색됩니다. 현행법령은 [법률:국회의결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이외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등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예) 상주시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보고 싶을 때, 별도의 검색범위 설정 없이 '상주 청년'을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의 설정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때 메인페이지로 돌아가 검색어를 다시 설정하는 대신,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 중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관련 법령이 검색됩니다.

2. 관련 법령정보 목록확인 및 법안 선택

검색하면 키워드와 관련된 국내 모든 법령정보가 가나다별로 법률, 시행률, 시행규칙별 순서로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시행일자/재개정구분/소관부처'을 확인하고 조회된 법령 중 상세히 보고 싶은 법령명을 클릭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법률용어

- **현행법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 **연혁법령** : 현재 내용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령
- **근대법령** : 근대시대의 법령
- **외국어법령** : 외국어로 된 법령
- **최신법령** : 최근에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
- **조약** : 나라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검색결과 상단에 다음 법령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세검색을 할 수 있고 구분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세화면의 다양한 기능

법안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법령의 본문을 기준으로 전문이 나타납니다. 좌측에는 검색결과의 목록과 선택한 법령의 목차가 나타납니다. 상세화면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붕어빵의 팥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세 기능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간편하게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❶ **제정·개정이유**	- 법안의 제·개정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
❷ **연혁**	- 법령의 재·개정 및 입법예고 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음 - 법령 앞에 예가 붙어있는 경우는 입법예고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을 뜻함
❸ **3단비교**	- 법령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3단 비교 - 각각 제공되는 조문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함. - 국회의결로 제정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한 내용 간편 비교
❹ **신·구법 비교**	- 법령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어떻게 재·개정되었는지 비교 및 조회 -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글씨로 표시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❺ **법령체계도**	- 법령의 상·하위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함
❻ **생활법령정보**	- 해당 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및 분류
❼ **화면 내 검색**	- 화면 내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단어 위치로 이동 - 원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구체적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본문 위 좌측상단 검색의 다양한 기능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본문 내 표식 판례 / 연혁 / 위임행정규칙/ 규제

판 : 클릭하면 **조문체계도 팝업창**이 열립니다.

연 : 클릭하면 **해당 조문연혁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행 : 클릭하면 **해당 위임행정규칙 팝업창**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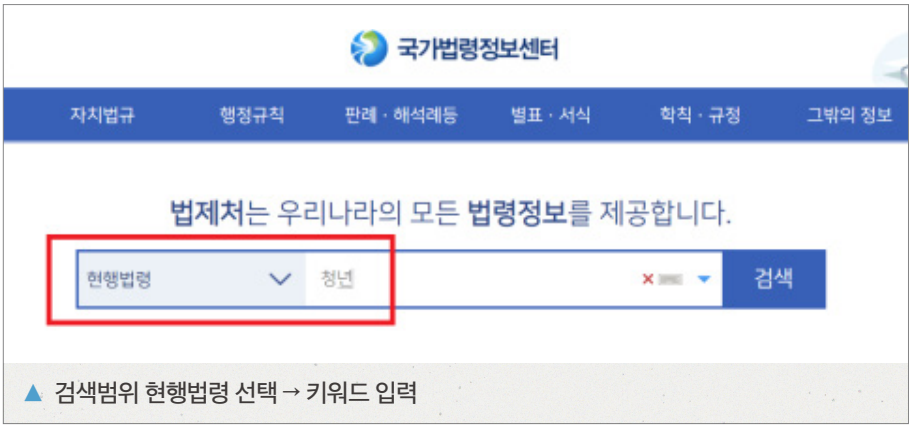
규 : 클릭하면 **해당 조문연혁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 :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조의 저장, 인쇄, 복사, 돋보기 기능**이 나타납니다.
돋보기를 누르면 해당 조의 글자를 키운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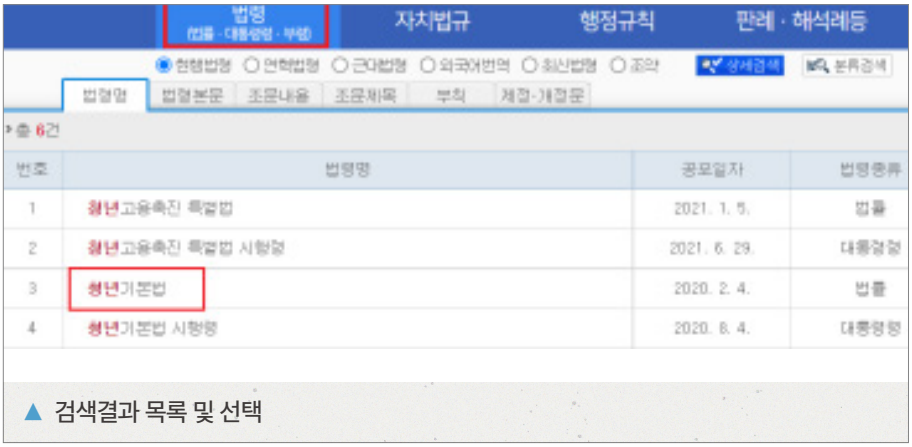
법령 본문 내 각각 조문 좌측 표식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서 이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사례

1) 현행법령 : 국회의결 법령 검색



▲ 검색범위 현행법령 선택 → 키워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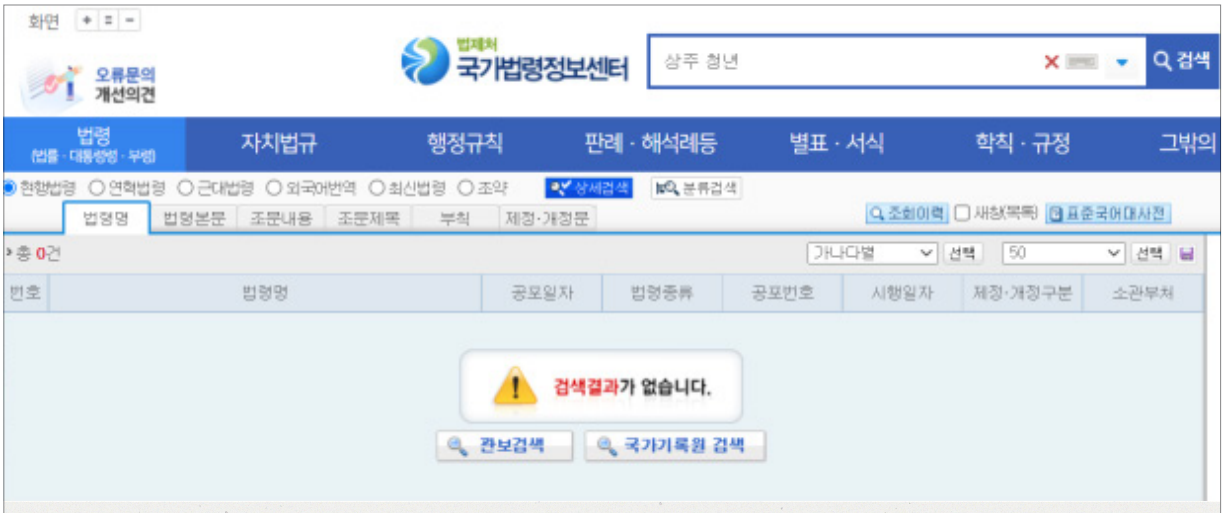


▲ 검색결과 목록 및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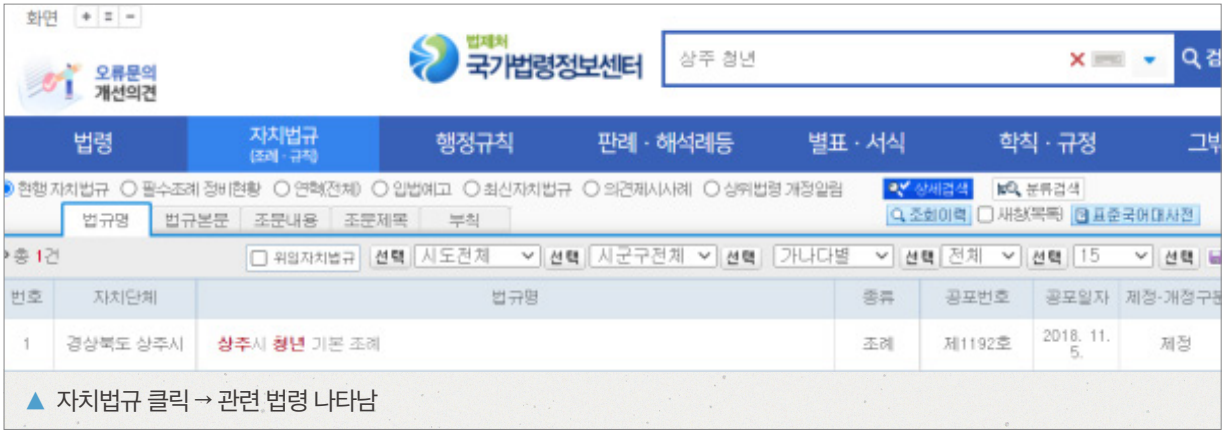
▲ 상세화면 내 다양한 기능 활용하기

2) 자치법규 : 지역 청년기본조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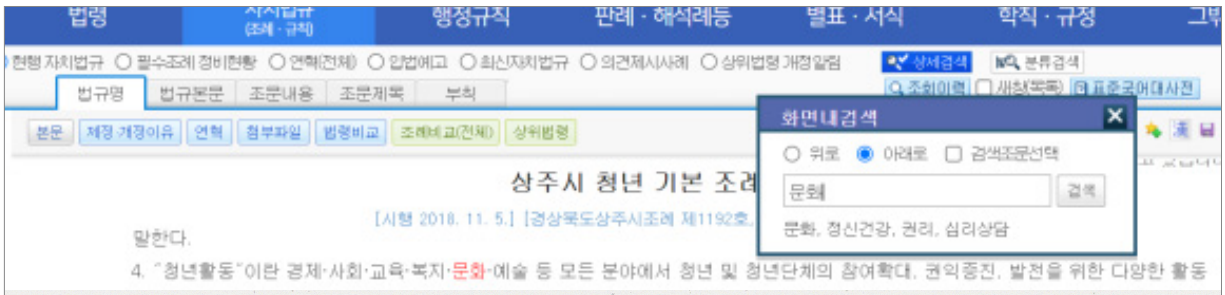
▲ 상세화면 내 3단비교 기능 활용하기



▲ 검색범위 설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인 법령으로 검색범위가 설정되어 검색결과 없음



▲ 자치법규 클릭 → 관련 법령 나타남



▲ 화면내검색 기능을 통해 본문에서 키워드 관련 조항 찾기

정보공개 사이트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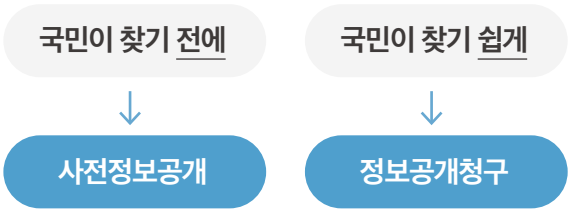
“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 예산은 얼마일까? ”
“ 내가 신청했던 00사업은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
“ 우리 동네 도로는 왜 해마다 갈아엎을까? ”
“ 어제 국무총리는 무엇을 결제했을까? ”

일상에서 무언가 궁금할 때 혹은 활동하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검색을 통해 얻는 불명확한 정보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열람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WHAT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 중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자발적 또는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의 청구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의 행정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로 만들어진 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기록이 저장되는 ‘국민의 정보 곳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단순 문서를 포함하여 CCTV와 같은 영상물, 도면, 사진,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상상의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보공개포털 한눈에 보기

정보공개제도의 의미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국민 대다수가 국가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인 약 110만 명[3] (20.12.30 기준)이 매일 생산하는 나라의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열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공개는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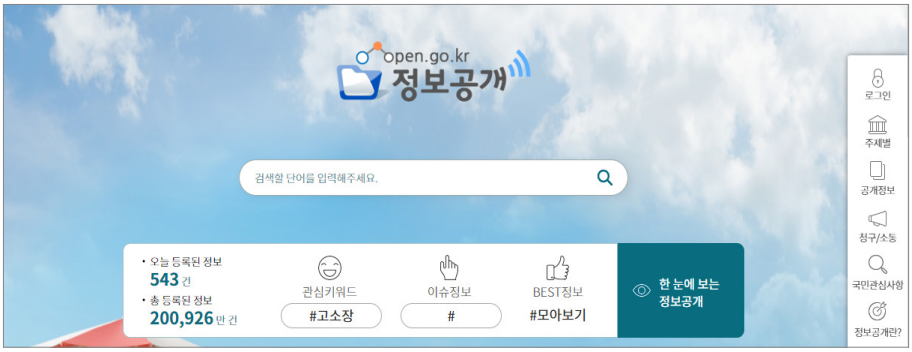
그럼 '국민의 알 권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정보공개를 통해 보장할 수 있을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정보 접근이 보장됨으로써**[4] 가능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행정·시정 감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직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3) 정부조직관리시스템 공무원 정원 2020년 12월 30일 기준
https://www.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4) 헌법 제21조

HOW 정보공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 사전공개된 정보 및 원문을 조회하거나 2) 공공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1. 국민이 찾기 전에 : 사전공개정보

우선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첫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관련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궁금한 정보가 어떤 유형인지 미리 알고 있다면 오른쪽 정보공개 메뉴에서 ❶공개정보 검색 선택,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고, ❷주제별 정보 검색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12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정보 기간 설정 검색할 때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 X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O

없을 수도 있어요

기관과 지자체별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상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자료가 사전공개되는 반면,
사전공개정보가 활발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 핵심 of 핵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5)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미성년자, 교도소 수형인, 재외국민 등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공법상의 법인(자체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 단체 명의로 정보공개청구 불가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 어디나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국공립 유아 • 초등 • 고등 • 대학교 교육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연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5) 정보공개법 제 5조

• 어떻게 청구할까?

❶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로그인

❷ 우측 메뉴에서 [공개청구] 키워드를 찾아 [청구신청] 클릭

❸ 청구신청서 항목 기재

• 꿀팁

청구기간을 명확히 한다.

00 사업 현황 → X

2019년 ~
2021년 06.30 기준
00 사업 현황 → O

• 꿀팁

청구내용의 범위를
자세히 적는다.

00 사업 현황 → X

00 사업 현황 → O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사본
: 사업목적, 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수행 주체 포함

가. 청구주제 선택 및 제목과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정보

제목	중앙정부 부처별 위원회 청년 참여 현황		
청구내용	1. 중앙정부 부처별 위원회 청년 참여 현황 - 각 부처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현황 일체 : (명칭, 위원 수, 임기, 위촉방식, 활동내용 등) 2. 각 부처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위원의 수 관련 자료를 기입할 양식을 함께 송부합니다.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많으십니다. 화이팅.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일자	2020.11.23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청년위원 참여 현황)양식.hwp	수수료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우선 [청구주제]를 선택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입력합니다. 다음 [청구내용]에는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받기 위해 청구내용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내용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편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필요시) 참조문서 서류 첨부하기

참조문서 |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일반 문서 및 이미지 이외의 파일(개인정보 포함)을 첨부하면 청구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문서' 항목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직접 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첨부하면 해당 파일에 맞춰 정보가 공개됩니다. 매뉴얼 마지막 부분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다. 청구기관 선택

청구기관 ?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관찾기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기관을 하위기관까지 정확하게 선택하여 주십시오.
· '21.7.23.부터 금융감독원은 기관사정에 따라 직접 접수처리를 하오니,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구자료는 정상적으로 처리 됨. 금융감독원[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기관을 선택합니다. 하위 소속 기관까지 선택하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복수로 선택 가능하여 한 번에 전국의 모든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청구기관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입니다.

라. 공개&수령 방법 선택하기

자료의 공개&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많이 활용합니다.

마. 청구인 정보 기재 후 청구 완료!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참고 및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체크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을 마치고 하단의 '청구버튼'을 클릭하여 청구신청을 완료합니다.

청구한 내용과 처리 상태 등은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나의 청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을 거쳐 1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청구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등을 이유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공개청구 이야기

00과 00 담당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신 000 님 맞으시죠?

청구신청을 하고 난 후, 어느 날 소관부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이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예시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상황1

왜 청구하셨어요? /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
청구한 이유를 알려주셔야 정보공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처

이와 같은 질문을 들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에게는 청구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청구 사유를 말해도 상관없지만,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청구목적에 따라 정보의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2

요청하신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청구 취하해주실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대로 받아보겠습니다."

- 대처

공식적인 절차로써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에 문제가 있을 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때 출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당하다.

사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악의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극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상황과 의도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유에 상관없이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그들의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면 천하무적입니다. 설령 예시된 상황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트린다 해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깔끔하고 멋지게 법대로!

* 다만 무례함으로 악성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실제 예시

❶ 2020년 중앙부처의 청년위원 위촉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신청서

제목	중앙정부 부처별 위원회 청년 참여 현황		
청구내용	1. 중앙정부 부처별 위원회 청년 참여 현황 - 각 부처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현황 일체 : (명칭, 위원 수, 임기, 위촉방식, 활동내용 등) 2. 각 부처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 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위원의 수 관련 자료를 기입할 양식을 함께 송부합니다.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많으십니다. 화이팅.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일자	2020.11.23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청년위원 참여 현황)양식.hwp	수수료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중앙정부 부처별 각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현황

○

연번	부처	위원회 및 직능단체명	총 위원수	개최횟수 (2020년 기준)	청년위원 수	임기	위촉방식	활동내용	비고
예시		ooo위원회							
1									
2									
3									

▲ 참조문서 활용 예시

❷ 서울시에서 집행한 특정 사업의 집행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신청서

* 청구주제	여가
* 제목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
* 청구내용 (4000byte 이내)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으로서 청년자율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의 집행상황이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합니다. 1.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0일 기준 2.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사본 - 사업목적, 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수행주체, 사업대상 등 포함) 2-1. 사업수행 용역 발주시 사업수행주체의 집행계획, 집행현황